

# “공무원 휴가 눈치보지 말고 가세요”

### 한번에 5일까지 몰아서 사용 가능... ‘월 1회’ 활성화

앞으로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이 적극 권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와 정부생선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6일 정도 사용에 그쳐 사용일수를 보다 늘리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결재하도록 했다. 월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후에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즉시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되는 경

우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에 따르는 약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의 자율 신장’에 따라 월 1회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1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만 9931명을 대상으로 연가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례휴가제 도입 후 월평균 연가사용인원이 약 34% 증가하는 등 공무원 휴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 보느라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자기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 복지부, 2자녀 이상 직원 승진 빨라져

### 200만원 포인트 지급·탄력근무제 등 출산장려 다양한 대책 도입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둘째를 출산하는 직원에게 200만원의 출산장려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의 임신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1.63명인 직원들의 평균자녀수를 2012년까지 2.0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올해 1월부터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근로형태·경력관리·교육·훈련·보육지원 등의 총체적인 출산장려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저출산과 보육의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와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특단의 출산장려대책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복지부는 직원들이 아이를 잘 돌보도록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거리의 친척집 등에 자녀를 맡긴 직원들을 위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신이 나 자녀 양육을 위해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짧게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와 본부 일부 국에서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는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의 통해 만 5세 자녀까지 확

대할 계획이다.

임신과 출산휴가, 취학전 자녀를 둔 여직원 업무는 같은 과 직원이 업무를 공유하는 직무공유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2자녀 이상을 둔 직원부터 인사상 우대와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성과평가는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2자녀를 둔 직원은 승진시 특별가점을 0.5점을 부여하고 3자녀의 경우에는 1점의 특별가점을 부여한다.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가 출산시에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포인트도 제공한다.

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관리, 근무관리 등 모성관리도 강화된다. 임신한 직원의 유산방지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여 건강, 근무 등에 산전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선, 임신모는 일반직원과 다른 색깔의 신분증 목걸이를 주고, 승강기 우선탑승, 인근지역 금연 등 일반 직원의 보호와 배려를 받게 한다. 또, 임신모 건강을 위해 전자파차단 앞치마, 쿠션, 발 받침대 등 편의용품도 제공한다.

임신직원은 당직근무·휴일근무·밤늦은 대기근무에서 제외하고, 근무 중 유산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미혼직원의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초·중·고교 예술강사 4156명 선발

### 지난해 보다 19.3% 늘어...다채롭고 수준높은 체험 기회 확대



◆ 문경부와 교과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의 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영화 330명, 무용 801명, 만화·애니메이션 500명, 공예 49명, 디자인 39명, 사진 24명 등이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대응 투자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2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다채롭고 수준높은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교육 분야와 수업시간을 늘렸다.

또한 올해부터 예술강사들에 대한 4대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거주자 배치율도 지난해 69%→77%로 확대하는 등 예술강사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지역 인력양성 여건도 개선된다.

문경부와 교과부는 “학교별 예술강사 수를 2012년까지 5,000명 목표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예술강사들의 평가 및 교육연수 등을 통한 질적 수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인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계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진 기자 hsi@eduyonhap.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3주간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513명, 경북 390명, 전북 342명, 경남 317명, 부산 283명, 전남 268명, 강원 214명, 충남 206명, 광주 183명, 충북 175명, 인천 169명, 대전 134명, 울산 117명, 대구 106명, 제주 78명 등이다.

분야별로는 국악 1,568명, 연극 845명,

## 불량 설 명절 성수품 집중단속

식품과 도라지 등 제사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의 귀성객 이용 시설 등 총 1만 5000여개 업체이다. 점검에는 16개 지방자치단

체, 6개 지방청 및 소비자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성기능 유사물질을 불법 첨가 행위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 식중독 예방 관리활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 희망근로 참여 13일부터 접수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한다.

선발은 기존 접수표에 의거해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를 우

선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청년실업자,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된다. 공무원의 배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는 일당 3만 3000원이며

일밖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는 사무실을 강제 소독하는 ‘의무 가정의 날’로 정해 직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전념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2012년에는 직원평균 자녀수를 2.0명까지 늘리고, 타 부처와 기관에도 널리 전파하여 전 국가적인 출산장려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는 상환금으로 지급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대상사업은 ‘10대 친서민·생산적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슬레이트 지방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친서민사업을 시행한다.

또,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Clean Energy의 선두주자, KIECO의 꿈은 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1994년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된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해 온 KIECO가  
이제 KIECO는 Clean Energy의 400, 700, 1000억 원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가 국민에게 에너지 공급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KIECO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한 선두주자입니다.

KIECO  
한국에너지공사